

추석 앞두고 ‘의료대란’ 비상

與 “의정갈등 풀어야”... 한동훈 “제일 최우선 과제로 생각”

대학병원 전공의 ‘탈출 러쉬’ 이어져 정부, 복귀 명분 없이 강경 태도 유지 안철수 “정부, 잘못된 점 인정해야” 김중인, 국민의힘 역할 부재 지적 한동훈, 갈등 해소 위해 의견 청취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을 대거 이탈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현실화할 ‘의료대란’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응급실 ‘9월 고비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지역·필수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의과 대학 정원을 한해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하고 사직해 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



민주당,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지역으로 붐비 수상방관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저 한계에 다다를 정도다. 중증·응급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치료의 최일선인 응급실 유지도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의 목소리다.

세종충남대병원, 순천향대전안병원 등 지방에서 시작된 응급실 진료 축소 가수도권까지 번지는 모양새여서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응급환자 찾는 명절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경기 남부 권역의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의정갈등의 과정에서 총 1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명의 사표가 수리되고 4명이 사표를 내면서 ‘탈출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

◆ 여권에서도 “의정갈등 풀어야”

정부가 그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2025 학년도부터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명분도 주

지 않자, 여권에서도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의대 증원에 합의 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자신이 다쳐 응급실에 가려 22곳의 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은 경험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 정부의 시책이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당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의료대란을 풀기 위해 “한동훈 당 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중재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 한동훈 측 “의정갈등 해소가 최우선”

한동훈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나 비공개 일선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 측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말뿐인 의정갈등 해소가 아닌, 진정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사안을 계속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의정 갈등 해소를 제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말보다는 중요한 시기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이르면 금주 국정브리핑... ‘4+1 개혁’ 등 설명 전망

정확한 날짜·형식 확정은 ‘아직’ ‘소통부재’ 불식 위한 질답 가능성 국민연금 구조개혁 설명 집중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국정브리핑을 갖고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갖고 ‘포용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교육·노동·의료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단에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하기 앞서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 선수와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입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추진 상황,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모르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취지인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 외부 일정을 줄이

고 각 소관 수석실이 추진 주요 현안을 보며 브리핑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3일 첫 국정브리핑처럼 윤 대통령이 답화를 발표하고,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 질답을 하는 것은 ‘소통

부재’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될 대목은 ‘4+1 개혁’ 중 연금개혁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선)이라도 하자고 나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연금개혁은 불가하다고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대통령실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실이 앞서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에 2030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전망이다. 이에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13%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방안대로면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할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 안정화 장치’도 제시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를 늘리고 수급을 줄이는 것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이력의 연금 가입 기간 인정 폭을 늘리는 ‘출산·군복무 크레딧(credit)’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9월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육·노동·의료·저출생 분야의 추진 성과와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늘봄학교’의 추진과 ‘사교육 카르텔’ 해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노동개혁에선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 보호를 중심에 둘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삼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저출생 문제에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

與野, 김문수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공방 예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野 “대안 제시 없이 원론적인 반대 뿐”

여야가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노란봉투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노란봉투법에는)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

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면 다른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A의원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월급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전부 하도급 체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

법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원론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맞서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B의원은 통화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해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공

세를 벌일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희동 열사를 ‘건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선 ‘순해배상이 특효약’이라고,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을 칭찬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A 의원은 “(김 후보자는) 그동안 막말 등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다”며 “‘건폭’ 등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을 가득 채우는 말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 과연 노동부 장관 책임자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도현 기자 yunbgh0611@